5·18 유공자 형제·자매 포함…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급물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개정안 정무위 통과…72명 회원 자격 얻어
부상자회·공로자회는 내부 갈등…41주년 기념식 전 설립 어려울 듯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41주년 5·18기념행사전까지 공법단체 설립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7일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에 따르면 관련 법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던 기존 유족회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던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 72명이 회원의 자격을 갖게된다.

올 1월 초 통과된 '5·1 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6호(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의 조항이 삭제돼, 기존 사단법인 5·18유족회는 공법단체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사단법인 5·18유족회는 그동안 현행법상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희생자들 가족들은 유족 자격뿐 아니라 향후 신설될 5·18 공법단체 회원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추천된 1명이 유족회 회원이 되도록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5·18유족회가 그동안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미뤄왔던 과정들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10~25인) 설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 선출도 5월 18일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겨 올해 41주년 행사에서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사단법인 5·18유족회장은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일 중요한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면서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가족을 기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야 모두 힘을 합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공법단체 구성을 둘러싼 대립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월 단체 내부에서도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5월 18일 내에 3개의 5월 공법단체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5·18 단체 관계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면서 "유족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치매환자 가정에 '파랑새 메신저' 찾아간다

광주 서구, 사회적 고립 방지·돌봄 부담 해소 기대

광주 서구가 27일 치매 환자 가족을 돕기 위한 '파랑새 메신저'발대식을 개최했다.

'파랑새 메신저'는 치매안심환경 조성 차원에서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함과 동시에 치매환자 가족에게 잠시 휴식을 제공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성됐다.

'파랑새 메신저' 결성을 위해 서구는 지난 3월 밴드, 홈페이지 등 SNS와 소식지, 안내문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4월 면접을 통해 선정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환자 행동에 대한 이해 ▲응급위기대응 교육 ▲태블릿PC를 이용한 인지활동 등의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은 총 36명의 파랑새 자원봉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파랑새 메신저 자원봉사단원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서비스를 신청한 치매환자 가정으로 찾아가 '가족쉼표 돌봄', '말벗'으로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인지활동·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소외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직동 자원봉사 캠프 개소

2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직동 자원봉사 캠프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대 연구팀, 달걀껍질 이용 뼈 재생 치료법 개발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버려지는 계란껍질과 나노기술을 이용해 뼈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체소재부품을 개발했다.

전남대 김장호(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윤귀덕(보철학교실) 교수연구팀은 계란껍질의 난간막을 녹인 후, 뼈 조직 내 세포외기질을 모사한 나노지지체에 코팅한 결과, 난간막을 코팅한 나노지지체가 뼈 재생을 월등하게 촉진시킬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널 중 하나로 알려진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또 미국 뉴욕에서 발행하는 'The Academic Times'의 특별기사로도 소개됐다.

김장호 교수는 "나노기술을 활용해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인 계란껍질을 뼈 재생 촉진에 필요한 의료용 소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연구결과로 인해 신의료기기 등 새로운 바이오산업화 재품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의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구센터 및 BK21 4단계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 지원으로 수행했다. 더불어 권용현·김다운 학생이 주저자로 참여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전남도,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안전손수레 보급

전남도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이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도록 안전손수레를 제작해 5월부터 보급에 들어간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 사망률이 줄지 않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8년 18%(61명), 2019년 21%(61명), 2020년 18%(51명) 규모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 대상 안전손수레와 안전조끼,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이번 사업은 평소 가파른 경사나 차도에서 손수레를 운행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손수레는 특히 안전 측면을 고려해 형광도색과 안전경광등, 자전거용 브레이크 등을 장착했다. 안전조끼는 새벽 시간대에 주로 수거하는 노인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색으로 제작했다. 안전화와 안전장갑은 날카로운 것에 손과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손수레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면서, 별도로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도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각 시군 환경과(자원순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화 전남도 물환경과장은 "앞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안전손수레 보급 사업이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연말까지 200만원 한도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감면율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되고, 감면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